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농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자 한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공익형직불제 관철을 위해 결연한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지난 4월부터 실질적인 개점 휴업 상태로 공익형 직불제 처리에 애를 태우는 농민들의 요구를 등한시한 채 혀송세월하고 있다. 이에 9월 국회가 공익형 직불제 통과의 마지노선임을 각인하고 더 이상 여야의 정쟁과 재정규모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지금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농업이 환골탈태를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그간 쌀 중심의 직불금은 쌀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전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는 그 효과가 미흡했다. 또한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 농촌 경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직불금의 형태로는 이러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공익적 기능 창출에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고령화된 농촌, 소득작목 편중, 소농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의 형태를 감안할 때 논작물, 밭작물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이 지급 되어 보다 다양한 소득 작목 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영세소농을 위해 일정 면적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기틀을 생산성 위주에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농정 혁신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이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농업의 기본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WTO 개발도상국 지위 논란’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세율 감축’과 ‘보조금 축소’라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이중 관세율 감축은 WTO협상에서 논의될

것이기에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며 큰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대상 보조인 쌀 직불금을 허용대상 보조인 공익형 직불금으로 개편하는 것은 보조금 축소라는 큰 위험성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일 것이다.

농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공익형직불제의 필요성과 도입을 수차례 국회에 꾸준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농업인을 위한 상임위는 왜 예산을 평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인가? 오직 농민의 생존권 걸린 직불금도 여야 정쟁의 산물로 여긴다면 내년 충선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250만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의 칼자루는 국민이 준 것임을 명심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합당한 재정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공익형직불금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농업인들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수많은 농업인들의 결연한 의지로 결성된 직불금 비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통과될 때까지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는 농업계의 요구에 답하고 정기국회에서 농업소득법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26일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